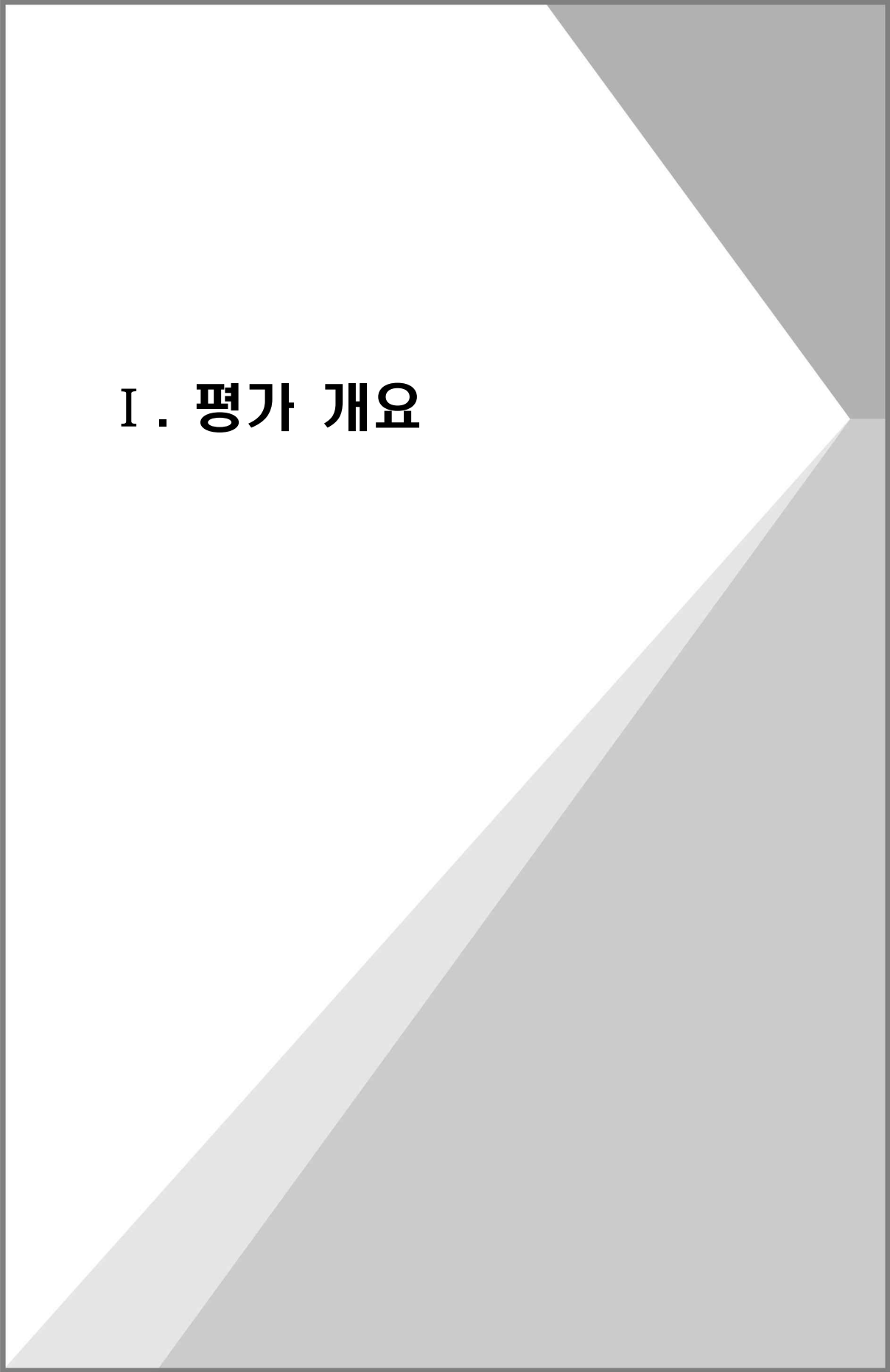

2025년 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6. 1. 2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순 서

I . 평가 개요	1
II . 부문별 평가결과	3
1. 역점정책 부문	4
2. 규제합리화 부문	17
3. 정부혁신 부문	23
4. 정책소통 부문	29
III . 후속조치 계획	34



I .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47개(장관급 24, 차관급 23)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

□ 평가부문 · 방법

- (평가부문)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
- (평가방법) 부문별 평가주관기관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상 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평가 및 일반국민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병행

평가부문	평가항목	주관	평가단	일반국민
역점정책	130개 역점정책과제 추진성과, 체감도 등	국조실	100명	15,600명
규제합리화	규제합리화 성과·체감도 등	국조실	17명	4,525명
정부혁신	기관의 혁신역량 및 성과, 체감도 등	행안부	16명	13,683명
정책소통	정책소통 활동 및 성과, 체감도 등	문체부	77명	15,600명

□ 추진경과

- ('25.9월) 새정부 국정기조를 반영,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년) 및 '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 수립, 국무회의 보고
- ('25.9월) '25년도 평가 세부지침 수립,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
- ('25.10월) '25년도 평가 대상 기관 설명회
- ('25.12월) 부문별* 평가 시행

*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Ⅱ. 부문별 평가결과

1. 역점정책 부문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47개 중앙행정기관이 국정성과 창출 등을 위해 '25년에 역점 추진한 기관별 역점정책 과제*의 이행실적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평가

* '25년 총 130개 역점정책과제 선정·평가(장관급 기관 3~4개, 차관급 기관 2개)

□ 평가대상

- 47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성평등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미통위, 공정위, 국민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3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데이터처, 지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청, 동포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과제별로 ①정책효과에 대한 정성평가, ②이행노력·목표달성도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③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 도출
 - (정성평가)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10개 분과, 100명)이 평가
 - (정량평가) 기관별로 제시한 계획이행, 목표달성 정도에 대해 평가
 - (국민만족도) 일반국민 대상으로 과제별 정책 성과, 만족도 등 조사
- 기관별 청년정책, 갈등관리, 지시사항 이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가감점 도출

□ 평가지표

○ 이행노력(30%), 목표달성도(25%), 정책효과(30%), 국민만족도(15%)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 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 - 과제별 이행계획 완수 여부, 부처 간 협업 노력, 리스크 관리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	정량/정성	30%
목표 달성도		- 사전에 설정된 목표치 달성여부 - 성과지표로 표시된 목표치 또는 완수해야 할 세부목표 달성 여부, 목표 달성의 질 등	정량/정성	25%
성과	정책 효과	-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성과 - 역점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효과 등	정성	30%
	국민 만족도	기관 소관 역점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전문리서치 기관 조사)	정성	15%

○ 대통령 지시사항(±3점), 갈등관리(±1점), 청년정책(±1점) 이행 평가

* 기관별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의 충실성, 집행 이행도 ▲적극적·선제적 갈등관리 노력, 갈등 해소·완화 성과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참여·소통 확대 성과 등에 대해 평가

2 평가 우수 기관

* 직제순

□ 장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 차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25년도 주요 성과

- 새 정부 출범 첫째 안정적 국정운영 회복,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토대로 경제, 사회, 일반행정, 외교·안보 등 각 분야에서 체감 성과 도출
- **경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대외 불확실성 개선,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 자본시장 신뢰 회복으로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
 - * 역대 수출 순위(연도): 1위 7,097억불('25) → 2위 6,836.1억불('24) → 3위 6,835.8억불('22)
 - 역대 최대 R&D 예산 확보('26년 35.5조원), AI·첨단기술 중심 미래 성장 토대 구축* 및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소비지수 회복**
 - * 국민 성장펀드(150조원 규모) 조성,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 ** △ 민간소비 1.3% 증가 △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 최근 5년 최고치 79.1 달성('25.10월)
- **사회**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 수준 제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등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돌봄지원 확대 등 국민 삶의 질 제고
 - *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수준 인상 결정(4인가구, 6.51%↑) △ '그냥드림 코너' 도입 등
 - 방한 관광객 역대 최다 유치*, K-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 관광·문화 강국 도약
 - * ('19년) 1,750만명(종전 최고치) → ('23년) 1,103만명 → ('24년) 1,637만명 → ('25년) 1,898만명^{잠정}
- **일반행정** 민주주의·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공공분야 AI 확산·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등 실용·속도 중심의 유능한 정부 구현
 - 재난·안전 관리 강화 및 상생·연대의 사회통합 기반 마련
 - * 역대 3위 폭염일수(29.7일, 최고 평균기온(30.7°C)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 전년 比 14.7% 감소
- **외교안보** APEC 등 다자외교 주도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외교 강국 위상 제고, 정부 주도 전략적 방산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 증가*
 - * △ 수출국 확대 (14개국→16개국) △ 수출액 증가 ('24년 96억불 → '25년 154억불)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대외 충격 대응·물가 안정적 관리 등에 주력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등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선제적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해외 발생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범정부 대응노력 강화

경제 분야

- ❖ 대내외 불확실성 속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경제 성장 모멘텀 확보
- ❖ AI 3대 강국 도약 및 첨단전략기술 육성 등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 ❖ 민생 경제활력 제고 및 균형성장 기반 마련,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주요 정책성과

□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성장세 회복 및 불확실성 완화

- 적극적 재정집행, 비상경제점검 TF 가동(6.4~), 가계부채·부동산PF 등 잠재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전방위적 거시정책으로 성장세 회복
- 한미 관세협상 타결(‘25.10월)* 등 대외 불확실성 개선, 수출액 사상 첫 7천억불 돌파로 역대 최대 수출성과** 달성
 - * △ 상호관세 25 → 15% △ 자동차·부품 관세 25 → 15% △ 항공기·부품 관세 철폐 등
 - ** 역대 수출 순위(연도): 1위 7,097억불(‘25) → 2위 6,836.1억불(‘24) → 3위 6,835.8억불(‘22)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코스피 사상 첫 4,000 달성(‘25.10.27),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생산적 기능 강화
 - *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도입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급정지, 과징금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先행정조치로 주가조작 엄벌

□ AI·첨단전략기술 중심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

- ‘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25.9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고성능 GPU 확보(26만장), AI 인재 양성 체계 마련* 등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 * △(학사) AI·SW전문·융합인재 양성 대학 신규 선정 △(석·박사) 장학금 제도 개선, GPU 인프라 확보 등 △(박사후) AI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 역대 최대 R&D 예산 확보*,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150조원)** 조성, 누리호 4차 발사 성공(‘25.11월) 등 첨단전략기술 육성 토대 구축
 - * ‘26년 R&D 예산 35.5조원 확보 (전년 대비 19.9%↑)
 - ** 첨단전략산업기금(75조원), 민간자금(75조원) 활용,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 공정경제 구현,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 민생 밀집 플랫폼 반칙행위* 적극 시정,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추진

* (배달앱) 최혜대우요구끼워팔기 등 제재 착수, (숙박앱)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 제재 등

**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 구축·강화 등

-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내수 활성화 및 소비지수 회복**

* △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당 15~55만원) △ 상생페이백 17.8조원 등

** △ 민간소비 1.3% 증가 △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BSI) 최근 5년 최고치 79.1 달성('25.10월)

□ 교통혁신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로 5극 3특 균형성장 기반 마련

- 지방권 광역철도·수도권 GTX 본격 추진* 및 도로·철도망 적기 개통·착공** 등 전국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 지원

* (지방권)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25.7월), (GTX) GTX-B 전구간 착공('25.8월) 등

** △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25.11월) 등 △ (철도) 목포보성선 개통('25.9월), 대구산업선 착공('25.6월), 천안-청주공항·남부내륙철도 실시계획 승인('25.12월) 등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마련('25.9월), 지역전용 R&D 신설(215억원 규모) 및 지역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등 지역별 핵심 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 5극 3특 경제권 : 성장과 집중 △ 5극 3특 생활권 : 연결과 확산 △ 행·재정기반 구축 등

** 모빌리티(울산), 헬스케어(강원) 등 비수도권 14개 시도 대상 R&D, 인력양성, 금융지원 등

□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 해양·수산 산업 혁신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 노력

- K-푸드+* 해외 판로 확대 등으로 역대 최대 수출(136.2억불) 달성,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혁신 통해 가격 안정 도모

* K-푸드(농식품 104.1억불) + 스마트팜, 농기자재, 농약 등 전·후방산업(농산업 32.2억불)

** 거래실적 : ('24년) 106개 품목, 6,737억원 → ('25년) 136개 품목, 1조 2,365억원

- 해수부 부산 이전('25.12월) 등 해양 경제의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 및 역대 최고 수준의 수산물 비축·방출, 유통혁신** 등으로 수산물 물가 관리 강화

* △ 북극항로 추진본부 출범 △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확대·개편

** △ 비축(4.3만톤)·방출(3.6만톤)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수립('25.11월) 등

- 농어촌 에너지 전환*, 인구감소지역 기본소득 시범사업(10개군) 실시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 햇빛소득마을(농지 등 태양광 설치, 마을 공동기금 활용) 도입 △ 해상풍력 이익공유제 마련 등

**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3개소, 해양레저관광거점 9개소 선정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 실질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 강화

- 외환·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실질 구매력 개선 제약, 체감 물가 상승 및 내수경기 침체 우려 지속

☞ 외환시장 대외충격·변동성 등 심층 모니터링, 선제적 대응 및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내수 회복 지속성 제고 필요

□ 안정적 수출 성장을 위한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필요

- 주력 품목에 이어 K-푸드,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도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대외 리스크 등에 취약

* '25년 수출액 7,097억불 중에 반도체 비중이 24.4%로 전체의 1/4 차지

☞ 대외 불확실성에도 수출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수출 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 전략 마련 필요

□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뢰 확보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 AI 활용 확산 과정에서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제도 기반 정비가 병행되지 못하는 경우 성장동력으로 전환 제약

☞ 사회적·윤리적 신뢰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AI 활용 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AI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 실효성 제고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순차 공급계획 등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가격상승 기대심리 확대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내 불안요인 지속

☞ 주택시장 동향과 가격 흐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한 시장 안정화 추진

사회 분야

-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공고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 ❖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안전한 노동시장 조성 노력
- ❖ 문화·관광 강국 도약 기반 마련, 탄소중립 이행 등 지속

주요 정책성과

- 취약계층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 생계 위기 발굴·대응 등 사회안전망 강화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수준 인상 결정(4인가구, 6.51% ↑, '25.7월),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30% 또는 15% → 10%, '25.10월) 등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수준 제고
 - *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금액
 - '그냥드림 코너(별도 신청·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 도입('25.12월), 저소득 가구 긴급생계 지원 확대 등 위기 발굴·대응 강화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노력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전공의 복귀 및 비상진료체계 20개월 만에 종료('25.10월) 등 의료 관련 사회적 갈등 완화, 공공·지역 2차 병원 육성* 등 공공의료체계 확충 추진
 - * 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175개소), '필수특화 기능지원 사업(29개소) 시행
 - 중증·응급질환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추진('25.12월 법사위 통과), 필수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최대 15억원, '25.11월)
 - * △ 중증도에 따라 기능·보상을 차등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 마련('25.12월)
 -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재정 지원 확대 △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1.3만명 치료) 등
 - ** 지역책임 의료기관 중심 체계 구축, 필수 의료 인력 지원 등 의료격차 해소 위한 근거 마련
- 돌봄 지원 확대, 양육비 부담 경감 등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및 야간 긴급돌봄 시범사업('25.9월~) 실시
 - * 정부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24년) 150% 이하 → ('25년) 200% 이하로 확대
 -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실시('25.7월), 맞춤형 돌봄 강화* 및 21년만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1:3→1:2) 등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 거점형 56개소, 연계형 183개소, 야간연장·휴일·24시간 어린이집 7,851개소 운영

□ 산재 예방 및 근로권익 보호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시장 조성 노력

-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25.9월), 전국 고위험 사업장 선정·밀착관리 및 불시 점검(2.2만개소) 등 산업재해 예방·점검 노력 강화
 - *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강화 △노사 역할·책무 확립 △인프라 확충 등
- 임금체불 청산율 역대 최고 수준 달성(90.2%, '25.11월)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노조법 2·3조 개정*('25.9월) 등을 통해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 K-콘텐츠 확산, 국가유산 가치 증진 등 문화·관광 강국 실현 기반 마련

- K-컬처 연계 홍보·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방한관광객 역대 최다 유치*
 - * ('19년) 1,750만명(종전 최고치) → ('23년) 1,103만명 → ('24년) 1,637만명 → ('25년) 1,898만명^{잠정}
- K-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장르별 맞춤형 지원 및 불법유통 차단 등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K-콘텐츠 경쟁력 제고, 지속 성장 기반 구축
 - * △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등
 - ** 저작권자 권리침해가 명백한 경우 긴급차단 조치 가능('25.12월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5.7월),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유치(부산) 성공('25.7월) 등 우리 국가유산의 글로벌 가치 증진

□ 중장기 탄소 정책 설계, 녹색산업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제4기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 * '35년 NDC, 18년(742.3백만톤CO2eq) 대비 53% ~ 61% 감축 목표
 - **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단계적 상향('30년 50%까지), 감축 투자유인 강화방안 마련 등
- 신산업 분야 녹색기업 집중육성(60개사, 사업화 쏠단계 지원), 중소·중견 기업 녹색보증(1.5조 규모) 등 맞춤형 성장지원*으로 탈탄소 산업 전환 촉진
 - * 우수기술 판로개척 등 정부의 맞춤형 지원으로 녹색산업 수출·수주 21.7조 달성

□ 의약산업 성장 지원을 통한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기반 구축

-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마련('25.9월), 신약 허가기간 단축 및 혁신 의약품 집중 지원** 등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 뒷받침 강화
 - * 규제·인력투자 등 산업생태계 지원 통해 △의약품 수출 2배 확대 △핵심 신약 창출 등 추진
 - ** △노전증 치료제 등 허가 기간 단축(420일→283일) △신속심사 대상 지정으로 새로운 치료제 23개 허가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속한 현안 해결 필요

- 응급실 미수용, 지역 필수 의료기관·인력 부족 문제 등 지속

☞ 근본적 대책 수립·추진과 함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충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조속히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

□ 업종·규모별 현장 여건을 반영, 선제적이고 세심한 산재 예방 관리 강화

- 산재 예방·점검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소규모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중대 사고 지속 발생

* '25.3분기 사업장별 사고사망자 수(전년동기 대비) : 50인(억) 이상 12명 감소, 50인(억) 미만 26명 증가

☞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해 업종·규모·위험도 등 사업장 유형별 특성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이행 필요

□ 지속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노력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매년 증가

* ('21년) 1.1% → ('22년) 1.7% → ('23년) 1.9% → ('24년) 2.1% → ('25년) 2.5%

☞ 디지털 기술 활용 등 학교 폭력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필요

□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물 공급 체계 구축

- 극심한 강수량 부족, 폭염에 따른 토양·수자원 증발로 단기간내 일부 지역에 돌발 가뭄이 발생하면서 생활 용수 부족 등 국민 불편 초래

☞ 기후 변화, 지형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수자원 공급 대책 마련 필요

일반행정 분야

- ❖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AI·디지털 분야 정부혁신 추진
- ❖ 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상생·연대의 사회 통합 기반 마련

주요 정책성과

□ 민주주의·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및 부패방지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정부조직법 개정*) 및 경찰국(‘25.8월)·경찰제도발전위원회(‘25.12월)를 폐지하여 경찰 중립성 확보
 - *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전담하는 공소청 신설(검찰청 폐지) 및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 공개, 실질적 조사권 보장 등을 위한 반부패 법령 개정 추진*
 -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권익위 전원위 의결(‘25.12월)

□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및 민원·행정서비스 고도화

- 중앙·지방정부에 민간 AI 활용서비스 도입*을 통한 공공분야 AI 확산
 - * 정부 내부망에서 활용 가능한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 개통(‘25.11월)
-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네이버, 카카오 등) 확대(‘25.7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정부24+)*’ 개통(7.10) 등 선제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
 - * 부처별 분산된 민원 시스템 → ‘정부24+’에서 통합 제공 및 중복인증 없이 사이트 연계
- 형사사법절차(수사·기소·재판·집행) 완전 전자화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고
 - * 검찰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연계(‘25.10월)하여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사건 처리 및 처분결과통지서 등 온라인 송달(‘25.12월 전국 실시)

□ 국민의 일상이 편안한 재난·안전 관리 강화 및 민생 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

- 폭염*·호우 등 각종 자연 재난에 총력 대응, 지반침하·다중운집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 * 역대 3위 폭염일수(29.7일), 역대 1위 평균 최고기온(30.7°C)에도 사망자 수 전년 比 14.7% 감소
 - ** △지반침하재난 신설 △지방정부 다중운집 재난 예방조치 강화 등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25.10월)

○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회적 참사 피해자 지원 강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설, 주생계수단 요건 삭제 등 관련 법령 개정·시행('25.11월)

** 이태원 참사 유가족·정부 첫 공동 추모식(10.29), 유가족 생활지원금(9억원) 지원 등

○ 전담대응체계 구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국제공조를 통한 동남아 지역 스캠 단지 대응**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예방·검거 강화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25.9월) 후 피해건수/피해액 월평균 26.2%/17.6% 감소

** 피싱범죄 피의자 (캄보디아) 64명 송환·58명 구속, (태국) 21명 송환·19명 구속

□ 분열 극복, 상생·연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 통합 기반 강화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실질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25.12월)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제도기반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 회복 기틀** 마련

* 4개 분과위 신설(10월), 위원 구성 다변화, 정책협의회 근거 신설 등 운영규정 개정(12월)

** △마을기업 육성 법적 근거 마련('25.8월) △사회연대경제 범정부 및 민관협의체 구성('25.11~12월)

○ 광복 80주년 계기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8.13), 기념행사(8.14~15)** 등을 통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활용

*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김기주, 한응규, 김덕윤 지사 등 6위 봉환(배우자 포함 9위)

** '광복절 경축식'·'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8.15), '광복절 전야제'(8.14),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선제적 예방 노력 강화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25.12월 쿠팡, '25.4월 SK텔레콤 등)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원인파악 및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지원

* 유출규모(신고 기준) : ('22) 498만건 → ('23) 1,011만건 → ('24) 1,377만건 → ('25) 1억여건

☞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제재 등 책임성 강화를 통해 기업의 위법 행위 억제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 대책·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필요

□ 국가 중요 정보자원 재해 예방·복구 체계 근본적 개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로 인해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었고, 중단 원인으로 시스템 분산·백업 미비 등 지적

☞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행정시스템 이중운영체계 구축을 철저히 하고, 데이터센터 설비기준(배터리·전기·항온항습 등) 대폭 강화 필요

외교안보 분야

- ❖ APEC 등 다자외교 주도과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외교강국 위상 제고
- ❖ 민주적 통제 강화와 첨단 국방역량 확충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 확립

주요 정책성과

□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한 다자협력 주도 및 국제적 위상 강화

-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25.10-11월) 및 ‘APEC AI 이니셔티브’(정상 차원의 최초 AI 합의문) 등 3대 정상 성과문서 채택**으로 글로벌 주요 의제 논의 주도
 - * APEC 정상회의 “국익에 도움됐다” 74%(11.7 한국갤럽 여론조사)
 - ** △ APEC 정상 경주선언 △ APEC AI 이니셔티브 △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 G7 정상회의(‘25.6월)·UN총회(‘25.9월) 참석 등 정상외교 재가동, 안보리 의장국 수임(‘25.9월), ‘28년 G20 의장국 수임(‘25.11월) 등 최상위 국제무대에서 위상 공고화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정상외교 성과 거양

- 한미정상 회담(‘25.8월·10월), 공동 팩트시트 발표(‘25.11월) 등 계기로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기반 마련 및 경제·안보 국익 제고*
 - * △ 통상 불확실성 제거(한미 관세협상 타결) △ 국방력 강화(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 △ 미래 먹거리 확보(조선업 협력 강화, 민간 우리농 농축 및 사육후핵연료 재처리 절차 지지 최초확인) 등
- 한일 정상 셔틀외교 정착, 中 정상 국민방문·정상회담(‘25.11월) 계기 한중관계 복원 및 실질협력 강화*
 - * △ 70조원 통화스와프 체결 △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6-’30) 등 한중 호혜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6건 및 계약 1건 교환

□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받는 군대 구현

- 민주적 통제,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계엄법 개정* (‘25.7월) 및 민주주의·헌법 가치 관련 장병 교육 강화**
 - * △ 국회 정치활동 보장 △ 국회 보고 규정 신설 △ 계엄사령관 권한 명확화 등
 - ** △ 민주주의·헌법수호 관련 교육(‘25.10월~) △ 간부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25.12월)
- 64년만에 문민 장관 임명, 개방형 직위 확대 등 국방 문민화 기반 마련
 - * △ 최초 인사기획관 일반직 임명 △ 1급(실장급) 이상 직위 실질 문민화율 50%→75%로 확대 등

□ 미래 첨단기술·선진 방위 태세 확립 및 방위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군 정찰위성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능력을 적기 전력화*,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국방 AI 첨단기술 활용 기반 마련 등 국가방위 태세 강화

* △ 군 정찰위성 2·3호기 전력화('25.6~7월) 및 5호기 발사('25.11월) △ 다산 정약용함·장영실함 진수('25.9·10월) △ 한국형 3축체계 예산 대폭 증액('26 8.8조원, 전년비 +21.3%)

- 북미·중동·유럽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부 주도 전략적 방산협력 추진으로 수출국 확대(14개국 → 16개국) 및 방산 수출 증가* 등 성과

* '24년 96억불 → '25년 154억불

□ 한반도 평화공존 및 대화·협력 여건 조성 노력

-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END 이니셔티브*' 제시('25.9월), 신뢰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남북긴장 완화 기반 마련

*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 △ 대북 화성기 방송 중단('25.6월) △ 방송 수단 철거('25.8월) △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25.9월) → 北 소음방송 중단 호응('25.6월), 파주지역 만족도 조사결과 '변화된 일상' 만족 응답 88%('25.11월)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발생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노력 강화

- 해외 취업사기, 스캠 범죄, 온라인 불법 도박 등 국외 발생 신종 범죄가 과거에 비해 복잡·다양화된 양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해외발생 범죄로부터 국내·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응 체계 지속 점검·보완 등 범정부 통합 대응 노력 제고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내실화

- 노동시장 격차*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높은 자살률·사회적 고립감 등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 지속

* 북한이탈주민-일반국민 월평균 임금 차이 59.1만원 ('25.12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 일자리 매칭·창업 지원 등 자립·자활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2. 규제합리화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 및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규제합리화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평가대상

- 36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2개)	기재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건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성평등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미통위,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14개)	식약처, 지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 등록규제 대상 여부, 업무의 대국민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 선정

□ 평가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성·정량평가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규제합리화평가단' 별도 구성

* 정성평가(86점) : 규제합리화 노력·효과·만족도 등 / 정량평가(14점) : 규제합리화 실적치 등

** 규제합리화평가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민간전문가 포함 17명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개선	- 중점과제 개선 - 범부처 규제 합리화 기획과제, 신산업 규제 합리화 추진실적 등을 포함한 핵심 규제 발굴·개선성과 및 노력 - 건의 과제 개선 - 규제신문고, 현장애로 등 건의 과제 개선성과 및 노력	정량/ 정성	57%
규제 품질관리	- 규제 비용 감축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개선성과 - 규제 관리 노력 등	정량/ 정성	28%
규제합리화 소통 및 체감도	- 규제합리화 국민소통 - 규제합리화 만족도조사	정량/ 정성	15%

2 평가 우수 기관

* 직제순

□ 장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차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25년도 주요 성과

- **(핵심규제 개선)**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대통령 주재) 등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통한 범정부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 규제개선 성과 창출
 -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핵심·갈등규제*를 대통령의 리더십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신속히 점검·개선하여 경제·산업 대도약 지원
 - * 경제형별 합리화 등 핵심규제 개선방안 발표('25.9-10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분야의 규제 개선으로 경기 활력 제고
 - * 핵심 관광규제 개선방안 3건 발표('25.8월, 관광규제 합리화 TF)
 - 민생규제 합리화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부담 완화
 - * 미판매 식품 이용 활성화 등 민생규제 합리화('25.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 규제신문고·현장건의·황당규제 공모를 통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를 발굴하여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17건 발표('25.12월,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 **(신산업 규제합리화)** 핵심 신산업 규제의 유연화와 597건의 규제샌드박스 법령 정비를 통한 신산업 규제합리화 실효성 제고
 - ABCDEF 신성장 동력의 발굴·지원을 통해 미래 주력산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업그레이드의 기반을 마련
 - * AI·바이오·콘텐츠·신재생에너지 등 핵심규제 17건 개선방안 발표('25.9-10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수립으로 중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적응
 - * AI 관련 협회·기업, 전문가, 25개 부처 합동으로 67개 세부과제 마련('25.11월)
 -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추진으로 산업생태계 혁신 및 성장기반 조성
 - * 천연·유기농 화장품 정부인증 폐지, 방송광고 분류체계 유연화 등
- **(규제 품질관리)** 규제 품질관리로 기존규제 합리성 제고 및 피규제자 부담 경감
 -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 및 재검토 규제 개선으로 피규제자 부담 완화
 - 사후규제영향평가와 806건의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실시하여 86건의 규제 개선·보완을 권고 및 규제품질 향상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 합리화와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한 현장홍보 강화 필요
- 규제합리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언론 협력 강화 필요

핵심규제 개선

주요 성과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등 범정부적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 민생·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나, 이해관계자·부처간 의견 차이로 장기간 미해결된 과제를 두 차례의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개선
 - * (1차, '25년 9월)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구역 범위 확대 등
 - (2차, '25년 10월) △(복지부·개인정보위) 사망자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기후부)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법제화 추진 등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시행('25.8월) 등 관광규제 발굴·개선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21건 발표('25.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
 - 사례** (기후부) 소비기한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 이용 활성화, (해수부) 어선 크기 상한 완화로 선원복지 개선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17건 발표('25.12월,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로 현장·수요자 중심의 접근 및 기업 경영애로 해소
 - 사례**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대상 확대, (지재처) 상표 우선심사 대상 확대 등
- 황당규제 공모전 등 국민참여를 통해 생활불편 규제 51건 개선 방안 발표('25.9월)
 - 사례** (행안부)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 국민·기업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행정조사 개선
 - 연구용역·기업 등 조사대상자의 건의 온라인 접수·검토와 부처간 조정회의 등을 통한 행정조사 개선과제 발굴·개선
 - 사례** (중기부) 중소기업 실태조사 간소화, (식약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간소화 등
- 규제신문고를 통해 현장의 규제애로 지속 청취 및 신속 해결
 - * '25년 검토과제 4,505건 중 4,260건을 법정기한 내 답변완료 (기한준수율 94.6%)
 - 사례** (문체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건축연한 기준 폐지, (국토부)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의 운행 종료지 인근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제합리화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언론과의 소통·협력 강화
 -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개편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25.12.3, 법사위 통과) 등
- 부처의 대국민 홍보와 기관간 협력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
 - * (국방부·원안위) 적극적인 부처 협업 및 규제 개선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신산업 규제합리화

주요 성과

-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핵심 신산업 규제 합리화 집중 추진
 -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10월)를 통해 AI데이터·자율주행·로봇·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 규제 합리화 추진
 - ▶ 사례 △(국토부) 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기준 마련 △(복지부) 난치질환 범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바이오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마련(‘25.11월), AI 산업 밸류체인 토대로 △기술개발 △서비스활용 △인프라 △신뢰·안전규범 등 전방위적 규제 재설계
 - ▶ 사례 △(국토부·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원본영상정보 활용 특례 마련 등
- 신산업·신기술 상용화 제고 등 성과 중심 규제샌드박스 추진
 - 국조실 중심 쏠주기 통합관리, 법령정비 의무 강화, 부가조건 최소화 등 규제샌드박스 성과 제고 기반 마련
 - *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발의(‘25.11.7), 제정 추진중
 - 기업의 신청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특례 적극 부여로 누적 2,339건 사업 승인, 관계부처 적극 협의 통해 597건 규제개선 완료
 - ▶ 사례 [과제승인] e-플랫폼 활용한 반려동물병원 전용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과기부 ICT융합)
 - [규제개선] 포터블엑스선 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중기부 규제자유특구)
- 현장 소통 확대,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규제 합리화 추진
 -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현장과 괴리가 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 사례 (산업·국토부)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 완화 (소방청)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 어업·농업 등 기존 산업의 수요자 맞춤형 문제해결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로 전환
 - ▶ 사례 (해수부) 항만 내 데이터센터·도심항공교통 진입 허용 등 스마트항만 구축
 - (농식품부) 데이터 표준적용 확대 자율주행 농기계 기준 마련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구축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산업 파급력 및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정비 노력 필요
 - * (권익위·보훈부·성평등부)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성과 도출 필요
-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기반으로 국민·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 필요
 - * (경찰청)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한 관련 규제체계 조속 정비 필요

규제 품질관리

주요 성과

- 규제비용 감축제도 운영을 통한 국민 규제비용 부담 완화
 - 소상공인 및 기업 부담 완화, 규제개선에 따른 신규 시장 창출 등 28건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 비용 감축
 - 사례** (국토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공유보관시설 용도를 신설하여 시장 창출 (복지부)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제공 의무화 규제 완화
-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를 통한 기존규제 합리성 개선
 - 국민·경제단체 및 주요 민간협회*로부터 제출된 의견(총 169건)과 민간 전문가(각 부처 추천 등)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 재검토 실시
 - * △ 주요 경제단체(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 업종별 주요협회(한국식품산업협회 등 20개)
 - ⇒ '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1,489건 중 378건 정비(정비율 25.4%)
 - 사례** △(경찰청) 오토바이면허 학과 교육시간 단축 △(기후부) 100만원 미만의 폐기물 부담금 분할납부 허용 △(소방청) 소방간부 후보생 응시연령 하한 완화 등
-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통한 피규제자 부담 경감
 - 총 806건의 신설·강화 규제심사 진행, 이해관계자 건의·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86건에 대해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 ▲ 기술규제영향평가(산업부 국표원) ▲ 중기영향평가(중기부) ▲ 경쟁영향평가(공정위)
 - ※ ▲ 권고율(권고규제 / 중요규제) : ('23) 81.3% → ('24) 82.6% → ('25) **86.9%**
 - 사례** (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중 '타르' 함량 공개 여부 및 합리적 공개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 권고 (개인정보위) 본인정보전송 시 대리인의 역할을 정보의 '저장'이 아닌 '전달'에 한정할 것 권고
 - 규제전문연구기관(KDI, 행정연)과의 협업을 통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시범 실시('23~'25년) → 기존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 (재검토연계형) '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중 심층 검토 필요 규제 → 총 12건 중 4건 개선 (심층검토형) 도입 후 장기간 경과 또는 개선 요구 多 규제 → 4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사례** (KDI·농식품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분석 → 건폐율 기준 및 인증절차 합리화 등 대안 마련 (행정연교육부) 대학강사 임용처우 분석 → 공개채용 절차 합리화 및 협업체 운영 정례화 등 대안 마련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심사 추진 △사후규제영향평가 지속 실시 위한 법적 근거 확립 등 국정과제 완수 위한 입법 추진 필요
 - * 상기 사항 법제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대응 및 후속조치 추진

3. 정부혁신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

□ 평가대상

- 47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건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성평등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미통위, 공정위, 국민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3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데이터처, 지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청, 동포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주관기관(행안부)은 평가등급 산정에서 제외

□ 평가방법

- 행안부 정부혁신평가단*, 주관부처 평가단 및 일반 국민** 체감도 평가

* 민간전문가(16명): 학계(12), 연구원(4)

** '소통24'를 통해 각 부처 대표 과제에 대한 국민선호도 심사 참여('25.11~12월, 약 1.37만명)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공통 지표	혁신 역량	• 기관장 혁신리더십 • 혁신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정량/ 정성	15%
	혁신 성과	국민과 소통하고 반응하는 정부(20)	• 국민 소통·참여 강화	정량/ 정성	65%
			• 민·관 협력 활성화		
		AI로 혁신하는 정부(25)	•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 AI 대전환(AI) 기반 마련·강화		
		성과를 창출하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20)	•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 적극행정		
자율 지표	• 기관별 대표혁신 과제(1개, 기관 자율 선정)		정성	10%	
	• 국민 체감도 평가(기관별 대표과제 대상)		정성	10%	

2 평가 우수 기관

* 직제순

□ 장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차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25년도 주요 성과

- (총평)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국민과의 소통·협력 강화, 공공 AI 대전환 및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중심으로 기관 소관업무와 연계한 다양한 혁신과제 추진을 통해 정부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기여
- (국민과 소통하고 반응하는 정부)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 협력 활성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 * (기후부)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설치로 지역주민에게 햇빛연금 지급
 - * (농식품부) 농민단체 요구와 기상 및 병해발생 피해정도를 검토, 깨씨무늬병 재해 인정 지원
 - * (소방청) 숙박업계, 민간플랫폼 운영사와 협업,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정보 공개
- (AI로 혁신하는 정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공공 AI 도입·활용 촉진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 * (식약처) AI 기반 식의약 모니터 시스템 운영으로 식·의약품 등 불법유통 감시 강화
 - * (농진청) 고령 축산인의 노동부담 경감 위한 AI 기반 모돈 체형관리 자동화 기술 개발
 - * (과기정통부) 민간수요를 반영, 스팸·해킹·피싱 관련 전화상담 데이터를 개방
- (성과를 창출하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 정착 및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 촉진
 - * (농식품부) 농식품 혁신 모임(MZ+시니어) 및 직급 호칭 파괴의 날 운영
 - * (복지부) 전 직원 마음건강 진단→결과 환류→상담·진료비 지원
 - * (관세청)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활용으로 업무시간 획기적 단축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들의 참여·소통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국민 소통 일상화 창구 마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 AI 도입·활용에 있어 상당 기관이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공 AI의 조속한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과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

국민과 소통하고 반응하는 정부

주요 성과

□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국민 소통·참여 활성화

○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 시 국민 의견 적극 반영

* (농식품부) 농정협의회, 농정 메신저, 국민디자인단, 모두의 농정ON(온라인 소통 플랫폼)
(국토부)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 차량 제조사, 택시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 이해
단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내실있는 국민 의견 수렴 및 참여 강화를 통해 현장 문제 해결

* (기후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과 주민이 참여하여 발전 수익금을
공유하는 상생방식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20년간('25~'45) 햇빛연금 지급
(복지부) 장애계와 간담회를 거쳐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인 점을 고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인 접근성 보장
(농진청) 공공서비스디자인단 운영으로 세대통합 텃밭정원을 활용한 공동체 자립모델 개발

□ 민·관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성과 창출

○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위기에 선제적 대응

* (농식품부) 민·관 협력으로 빈집은행 서비스를 개시하여 빈집 재생 활성화
(금융위) 공공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한 150조원 펀드를 조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청) 민간과 협업, 무역·외환 데이터를 결합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 민·관 데이터 공동 활용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 (소방청) 숙박업계, 민간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정보 공개
(기상청) 민·관 협력으로 맞춤형 기상자료(일사량, 바람 등)를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전용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개선·보완 필요사항

□ 디지털 기반의 상시 소통을 활성화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필요

□ 전략적 협업과제 발굴 및 공동의 목표·성과의 명확화, 원활한 협업 이행, 성과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 협업 설계 노력이 필요

AI로 혁신하는 정부

주요 성과

-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 선제적·맞춤형·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
 - * (식약처) AI 기반 온라인 식의약 모니터 시스템(AI 캡스) 운영으로 식·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 강화
 - (소방청) 소방대원 긴급 출동 시 공동현관 출입문 개방을 위한 '119패스' 운영
 - 포용적 서비스 확대를 통한 행정 사각지대 해소
 - * (동포청)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을 위한 아이핀 발급 서비스 제공
 - (농진청) 고령 축산인의 노동부담 경감 위한 AI 기반 모돈 체형관리 자동화 기술 개발
 - AI 기반 선제적 예측·탐지 서비스로 국민 안전 확보
 - * (농식품부) 영상분석 기술 및 AI 기반 계란 등급평가 체계 자동화로 식품 안전 강화
 - (개인정보위) AI 기반 통화문맥·성문 분석으로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서비스 지원
- 공공 AI 도입·활용 촉진을 통한 AI·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AI 서비스 개발·연구에 활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민간에 데이터를 개방
 -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민간 수요를 반영하여, 스팸·해킹·피싱 관련 전화상담 데이터를 비정형 형태로 개방
 - (산림청) 산림 장기 생태 데이터를 AI 분석에 적합한 시계열 형태로 개방
 - 기관별 특화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
 - * (질병청) 결핵약 복약 확인 AI 전화서비스 '약속이' 시범사업 시행
 - (관세청) 마약·밀수·탈세 등 국민 체감도 높은 현안에 대한 기존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마약 고위험관리대상 식별, 불시검사·단속에 활용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수 기관이 AI 기반 민원 상담 챗봇 등 초기 단계의 AI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AI 활용이 가능한 업무 발굴 및 적용 분야의 단계적 확대 필요
- AI 학습 및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충분한 데이터 확보, 데이터 구조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 필요

성과를 창출하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

주요 성과

□ 조직문화·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공직사회 활력 제고

○ 구태의연한 관행 타파와 내부 소통 활성화로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

- * (농식품부) 농식품 혁신 모임(MZ+시니어) 및 직급 호칭 파괴의 날 운영
(복지부) 전 직원 마음건강 진단 → 결과 환류 → 상담·진료비 지원
(국토부) 소통데이, 팀웍빌딩 등 운영으로 열린 소통문화 정착
(지재처) 다양한 부담 완화형 프로그램(취미, 관심사 등) 운영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

- * (해수부) '업무포털-의정자료-전자유통' 연계를 통한 국회 업무 효율화
(식약처) 정기전보 시마다 공식 인수인계의 날^{이틀} 운영 및 표준 서식 배포
(관세청) 무역통계 자동추출 프로그램 개발·활용으로 업무시간 획기적 단축

□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촉진

○ 첨단기술 활용, 관계기관 협업 등 적극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 * (농식품부) 지방정부·지역공동체 간 협업을 통해 농촌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인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추진
(해경청) 넓은 해역의 항공 단속·순찰에 항공 채증영상 AI 분석 기술 도입

○ 모호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행정 관행,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선제적 개선

- * (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범 실제 목소리에 기반한 실시간 통화 탐지로 피해 사전 예방
(복지부)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시 해촉(퇴직)증명서 제출 폐지
(산림청) 광업법상 '채취'의 범위를 적극 해석, 광물 탐사(시추) 및 채굴용 국유림 사용을 허가하여 핵심 광물자원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

개선·보완 필요사항

□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기관별 성과 연계 개선책 마련 필요

□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및 개선사례 확산 등 지속 가능한 노력 필요

4. 정책소통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성과 체감 확산 등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평가대상

- 47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 차관급 23)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성평등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미통위, 공정위, 국민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3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데이터처, 지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청, 동포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주관기관(문체부)은 평가등급 산정에서 제외

□ 평가방법

- 부처별 정책소통 활동 및 소통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정책소통 활동) 부처 정책홍보 참여활동, 보유매체 협업 홍보 등 정량평가
 - (정책소통 성과)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소통, 언론보도 대응 및 우수 사례, 디지털 소통, 기관장 소통 성과를 정량·정성 평가
- 체감도는 소통만족도와 온라인 소통 체감도로 구분하여 정량·정성 평가
 - (소통만족도)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소통활동 및 성과에 대해 국민만족도 조사(전문리서치기관 의뢰)
 - (온라인 소통 체감도)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통해 국정 현안 및 부처 정책 주요 키워드 분석 평가(정성) 및 SNS 채널 이용자 반응 조사(정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정책소통 활동	- 부처 정책홍보 참여 활동 - 부처 정책홍보 협의체 참여 및 주요 홍보 요청 사항 이행 실적 등	정량	13%
	- 부처 보유 매체 협업 홍보 - 각 부처 보유 매체(영상·문자매체, 간행물)를 활용한 범정부 협업 홍보 활동 노력		
정책소통 성과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소통 - 주요 정책 발표 컨설팅 이행 성과 및 내외신 대상 소통 성과 달성 우수사례(새로운 방식의 소통 시도 등 포함)	정량/ 정성	75%
	- 언론보도 대응 및 우수사례 - 주요 현안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신속도, 충실도, 실제 언론 반영 성과		
	- 디지털 소통 - 누리소통망(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확산 성과, 디지털 광고 활용도		
	- 기관장 소통 - 언론 및 현장 소통 성과, 이슈관리		
체감도	- 소통 만족도 -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 정책 소통 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전문리서치 기관 조사)	정성	6%
	- 온라인 소통 체감도 - 빅데이터 분석 및 SNS 채널 이용자 반응	정량	6%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가감점(±2점)

2 평가 우수 기관

* 직제순

□ 장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차관급

- 인사혁신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25년도 주요 성과

- 새 정부 국정목표 및 정책방향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신뢰도 제고
 - 국정 어젠다 발표 시 사전 컨설팅을 통해 홍보방향 등을 설정하고 부처·민간과 협업하여 정책성과 홍보 극대화
 - * 사전 핵심 메시지 조율을 통해 정부의 R&D 정책에 대한 긍정 보도 견인(과기정통부)
 - * 범부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협업 홍보로 내수진작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각인(중기부)
 - 사실과 다른 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관장 중심 후속대응으로 부정 여론 확산 방지
 -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전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설명자료 배포, 장관·본부장 언론 브리핑,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협상 성과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산업부)
 - * 국정자원 화재로 '나라장터'가 마비되어 수요기관, 조달업체가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구 노력과 결과를 상시 보도하여 긍정여론 형성(조달청)
- 협업 콘텐츠 제작 및 쌍방향 소통으로 디지털 홍보 성과 제고
 - 다양한 유형의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최신 트렌드 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타깃 홍보 실시
 - * 딱딱한 정책을 대화체 및 'می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구성으로 쉽게 전달(노동부)
 - *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플루언서 채널에 동시 게시하여 여행 관련 타깃 노출 확산 및 지속적인 관심 유도(관세청)
 - 기관·기관장 SNS 등을 통해 국민과 쌍방향 소통하고 디지털 캠페인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
 - * 녹조 안전관리 정책 관련 기관장의 유튜브 언론 출연, 정책브리핑, 현장 점검, 간담회 등 영상을 장·차관 SNS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전달(기후부)
 - * 폭염을 주제로 한 공감형 영상 제작, 민간 기업·KBO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한 캠페인 홍보로 핵심 메시지 확산 및 국민 참여 확대(기상청)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콘텐츠 노출(검색)을 확대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절한 해시태그 및 키워드 활용 전략 수립 필요
- 부처 디지털 광고(캠페인)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유통 매체(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캠페인 제작과 참여형 디지털 광고의 설계 필요

새 정부 국정목표 및 정책방향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신뢰도 제고

주요 성과

- 새 정부 비전과 국정목표가 구체화되도록 체계적인 홍보 실시
 - 국정 어젠다 발표 전 컨설팅을 통해 발표 방향·핵심 메시지 등 설정
 - * (과기정통부) 사전 핵심 메시지 조율을 통해 정부의 R&D 정책에 대한 긍정 보도 견인
 - * (인사처) 공무원 복종 의무 폐지 등 사전 리스크 점검으로 긍정 여론 형성에 기여
 - * (국가유산청)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기관 전문성 및 정책 의지를 부각하는 메시지를 도출하여 새 정부의 국가유산 정책 방향 긍정 각인
 - 부처·민간 협업을 통한 새 정부 대표정책 주요성과 홍보
 - * (노동부) 안전 일터를 위한 노사정 협업 라디오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여 노동 안전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 (중기부) 범부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협업 홍보로 내수진작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각인
- 사실과 다른 보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정책 신뢰성 향상
 - 사실과 다른 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
 - * (과기정통부) 정부의 과기인재 정책 관련 보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부정여론 확산 방지
 - *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관련 보도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 확보
 - * (조달청) 국정자원 화재로 '나라장터'가 마비되어 수요기관, 조달업체가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구 노력과 결과를 상시 보도하여 긍정여론 형성
 - 기관장 인터뷰, 설명자료, 브리핑 등 후속대응으로 부정여론 확산 방지
 - * (산업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전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설명자료 배포, 장관·본부장 언론 브리핑,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협상 성과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
 - * (중기부) 실제 정책 수혜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장 기고 및 특집 기사를 통해 '복잡한 제도' 프레임을 '가치 소비·상생' 프레임으로 전환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민들이 정부 2년 차 주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발표 단계별 체계적인 컨설팅 필요
 - * 홍보상황 및 발표여건 진단, 여론 분석→핵심 메시지, 홍보방향 및 리스크 검토, 홍보 프로그램 제안→여론반응 모니터링, 후속대책 발표 시 추가 제언 등

협업 콘텐츠 제작 및 쌍방향 소통으로 디지털 홍보 성과 제고

주요 성과

- 최신 트렌드 기법을 반영한 정책고객 맞춤형 타깃 홍보 실시
 - 부처 핵심 정책 관련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으로 접근성 제고
 - * (노동부) 딱딱한 정책을 대화체 및 'می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구성으로 쉽게 전달
 - * (인사처) AI를 활용하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동화 형태로 제작하여 정책 필요성 및 핵심 메시지 전달
 -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콘텐츠 제작을 통해 메시지 전달력 강화
 - * (관세청)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플루언서 채널에 동시 게시하여 여행 관련 타깃 노출 확산 및 지속 관심 유도
 - * (중기부) 자취생, 부부 유튜버 등과 협업하여 소비 혜택, 할인 축제 등 타깃 맞춤형 콘텐츠 제작
- 쌍방향 소통으로 정부 주요정책 관심 제고 및 국민 참여도 제고
 - 기관·기관장 SNS 등을 통해 국민과 쌍방향 소통 실시
 - * (산업부) 장관 APEC 현장점검 브이로그, 페이스북 소통 등을 통해 긍정여론 형성
 - * (기후부) 녹조 안전관리 정책 관련 기관장의 유튜브 언론 출연, 정책브리핑, 현장 점검, 간담회 등 영상을 장·차관 SNS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전달
 - * (해수부) 기관 SNS 댓글에 건의사항 피드백, 정보 정정 등의 답글을 게시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홍보 효과 제고
 - 디지털 캠페인 활용으로 주요정책 관심 제고
 - * (기상청) 폭염을 주제로 한 공감형 영상 제작, 민간 기업·KBO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한 캠페인 홍보로 핵심 메시지 확산 및 국민 참여 확대
 - * (경찰청) 보이스피싱 수법 및 예방 사례 관련 영상(5종), 포스터, 웹진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방위 캠페인 실시
 - * (조달청) 달리기 앱 협업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조달런' 캠페인 기획, 1만 명 이상의 국민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한 자발적 메시지 확산으로 기관 인지도 및 정책 지지도 개선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콘텐츠 노출(검색)을 확대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적절한 해시태그 및 키워드 활용 전략 수립 필요
- 부처 디지털 광고(캠페인)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유통 매체(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캠페인 콘텐츠 제작과 참여형 디지털 광고의 설계 필요

Ⅲ. 후속조치 계획

☐ 평가결과 공개

- 공개범위 : ▲ 부문별 우수기관(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 역점정책 부문 주요실적,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개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 포상

- 부문별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 유공 포상 약 30점(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개선·보완 필요사항 후속조치

- 평가시 지적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부처별로 개선 추진
→ 후속조치 추진결과 점검 (연말 평가 반영)